+

# 기습폭우 뒤 폭염주의보…극한날씨에 시민들 '몸살'

시간당 77㎜ 강한 비 그친 직후 최고기온 33도 웃돌아 광주·전남 비 피해 신고 87건···이번 주도 '폭염 영향권'

주말 동안 광주·전남에 '시간당 77mm' 의 기습폭우가 내리는가 하면 그 직후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아 폭염주의보 가 발효되는 등 극한의 날씨가 이어져 시민들이 몸살을 앓았다.

이번 주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 로 예보돼 건강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부터 광주·전남 전역에 순차 적으로 발효됐던 호우 특보(광주·담양 경보)는 같은 날 오후 2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이후 곧바로 흑산도와 홍도 등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광주·전남 전역에 발 효된 폭염 특보(곡성·구례·화순 경보) 는 이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전남지 역 누적 강수량은 곡성 108mm, 보성 95.5 mm, 신안 89mm, 담양 76.5mm, 장흥 76.3mm, 광주 72mm, 영암 67mm, 무안 60mm 등으로

이 기간 곡성에는 시간당 77㎜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많은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 나,지난 19-21일 광주·전남에선 각각 44 건·43건의 피해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

신고 유형은 도로 침수가 42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시설물 안전조치 39건 ▲ 급배수5건 ▲인명대피1건순이었다.

인명 대피 1건의 경우 이날 오전 3시5 7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에서 불어 난 물에 갇힌 시민 5명이 구조된 건이었

해상·항공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 으나, 이날 오후 1시 기준 국립공원 5개 소, 징검다리 5곳, 주차장 2개소, 산책로



물에 잠긴 풍영정천 지난 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풍영정천이 물에 잠겨있다. 이날 풍영정천2교 지점에는 수위가 상승,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었다.

1곳, 유원지 1곳의 출입 금지 조치는 여 전한 상태다.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전날 광주·전

남지역 최고기온은 광양이 33.6도로 가 장 높았다. 그 뒤는 고흥 33.3도, 담양 33 .1도, 여수·광주 33도 등의 순이었다.

이날 최고기온은 구례 35도, 순천 343 도, 곡성 34.2도, 담양 33.7도, 화순 33.6도, 광주 33.5도를 기록하는 등 전날보다 높 은 분포를 보였다.

이번 주 광주·전남에 비 소식은 없다. 다만,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대 기 불안정이 심해 소나기가 내릴 가능 성은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웃도는 무더 위는 이번 주도 이어지겠다.

22일 광주·전남 최고기온은 화순·구 례가 33도로 가장 덥겠으며 나머지 지 역은 28-32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23일 광주·전남 최고기온은 29-33도 로, 24-26일은 28-34도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전남지역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 으니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 다"며 "비가 내리는 곳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덤 겠다"고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3시 필리핀 마닐 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3호 태풍 개 미는이날오후4시기준중국을향해북 상 중이나, 이동 경로 변화에 따라 한반 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장은정기자

# '한국전쟁 부역자' 낙인 사망 모녀 유족, 손배소 승소

#### 법원 "보도연맹 희생 신빙성…최대 1억700여만원 지급하라"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부역자 로 몰려 사망한 모녀의 유족에게 국가 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 사는 21일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A씨 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 라 국가가 각각 400여만-1억700여만원 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1951년 2월13일 영광군 홍농 면에서 딸과 함께 군경에 의해 숨졌다. 이들은 A씨의 남편이 받은 부역 혐의 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회는 지난해 A씨 모녀에 대해 '영광군 보도연맹 관련 희생자'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다만, 제적등본에 A씨의 사망일이 실제보다 한참 후로 기재됐고 함께 숨 진 둘째 딸은 등본에 등재조차 되지 않 아 원고들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망일이 다르 게 기재된 것은 A씨가 부역 혐의자로 살해된 사실이 알려지면 유족이 핍박 받을 우려가 있어 뒤늦게 신고했을 가 능성이 있다"며 "함께 사망한 둘째 딸 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적등본 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

이어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 춰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 이지만, 증언한 참고인의 진술이 진실 규명 결정과 다르지 않아 신빙성이 있 다"고밝혔다. /안재영기자

### 금호타이어 공장서 고무에 깔린 40대 사망

#### 지게차 운반 중 사고…치료 19일만에 숨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쏟아진 고 무에 깔린 40대 근로자가 치료 19일 만 만 19일 만인 이날 오전에 사망했다. 에 사망했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금호 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근로자 A (40대) 씨가 운반 중이던 고무에 깔렸다. 이 사 고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당시 한 지게차 운전자가 고무를 옮기 는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 게차를 급정거하자 차량 위 적재물이 쏟 아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한 변 사처리를 마쳤으며 이후 사건 조사는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맡는다.

한편해당사고와관련해전국금속노동 조합금호타이어지회는이날성명을통해 "지난 4월29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도 기계 협착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 망했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건 사업 주가 노동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저버렸기 때문이다"고주장했다.

> 이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노동자를 죽음으로내모는회사를엄중히처벌하고 모든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옥근기자

## 성범죄 수배자, 18년만에 시민 신고로 붙잡아 구속

신고로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간 온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찰청의 등 혐의를 받는 김모(54)씨를 지난 19 일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 시민의 신고로 그는 지난 17일 서울 동

**CMYK** 

성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자가 시민 택에 침임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 을 받는다. 범행 이후 도주 행각을 벌여

>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명단을 보고 김씨의 얼굴을 알아본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 부받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문구 모처에서 붙잡혔다.

한편 김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 소시효는 오는 2027년까지였다.

/목포=정해선기자

+

#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선출 무효"

#### 일부 회원 '불법 경선' 주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일부 회원 이 지난 6월 선출된 조규연 신임 회장 에 대해 불법 경선으로 당선됐다며 법 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부상자회 회 원 2명이 조규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심문 기일을 지난 19일 열었다.

신청인 측은 "조 회장은 선출 전 자체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추대됐는데, 이는 "신임 회장 선출 총회를 개최한 황일봉 전 회장도 회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 공하며 진행한 회의에서 복권이 결정돼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조회장측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3명의후보가모여내부경선을통해 후보를 단일화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조 회장은 최근 부상자회 전국 시도지부장 7명 중 6명을 해임 처분했는 데, 이들 중 5명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 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조회장측은시도자부장의임기가전회장 사전선거운동 금지 정관 위반"이라며 과함께끝났다는 입장인반면,해임된지부 장들은정관상200년까지라고주장중이다. 재판부는 2건의 가처분에 대한 심리 를 마치는 대로 인용 여부를 밝힐 계획 /안재영기자



